

통일한국과 남북의 지역갈등

장 원 석*

1. 서구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균열의 범주는 전통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이다. 하나는 종교와 문화, 인종, 언어적 차원에 근거한 갈등이다. 이는 근대민족국가의 등장에 따른 부산물이다. 각자는 새로운 정치형식속에서 자신이 소속된 하위공동체와의 유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갈등으로서 곧 계급간의 이해대립을 의미한다. 근대민족국가의 산업화 과정은 계급의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켰고 계급갈등은 산업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두개의 범주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가령 선거의 경우 종교나 언어의 문제가 계급보다 우선한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는 상황을 일변케 하였다. 계급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탈물질주의적 경향을 촉진시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전통적인 계급갈등의 문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중산층의 급진화가 이루어졌으며 녹색운동의 이념은 전통적인 좌파정당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새로운 갈등의 양상은 종전의 계급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중심부위가 해체된 다원적 사회를 상정하는 신사회운동의 논리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균열은 다기적이며 단일한 척도로서 포착 불가능하고 따라서 문제의 해결 역시 국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된다.

서구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있어서 갈등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이익대표 기제의 실패를 야기하여 복지국가의 위기, 네오코포라티즘의 종말을 운위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균열의 주체와 지지정당간의 굳건한 결속력을 주장해온 립셋(Ripset)과 로

* 제주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칸(Rokkan)의 결빙명제는 도전을 받고 있다. 다기화된 현대사회의 갈등구조 속에서 하나의 정당이 특정집단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는 서구사회와 달리 인종이나 언어, 문화적 갈등이 부재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균열구조는 지역갈등에 의해서 여타의 갈등변수가 압도당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선거형태에서 나타나는 지역변수의 효과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영호남간 지역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음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계급간의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좌와 우, 보수와 혁신의 대결구도가 정립되었다. 한때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혼재되면서 문제의 초점이 불투명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민간정부에 의한 민주화조치로 인하여 현재는 선택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뒤늦게 서구 산업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직면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한국사회는 후발주자의 집약적인 경제발전과 정보통신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서구의 후기산업사회적 징후를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녹색운동이 서서히 힘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산업폐기물의 처리나 수질오염,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연 파괴의 문제들이 시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전통적인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개념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이슈들과 직면하고 있다. 계급적 균열과 탈물질주의에 관한 균열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양자가 상이한 세계관에 입각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투표행태에 관한 한 지역변수가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미약하나마 계급지향적 투표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앞으로 탈물질주의적 동기가 점차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나 종교역시 한국사회의 중요한 갈등변수이며 여타 변수와 충돌시 종교가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군의 자손으로 일괄될 수 있는 동질적 사회가 아니며 역사의 보편적 행로와 궤를 같이하여 다차원적 균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역문제가 여타의 갈등변수에 대해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한반도의 통일모형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개의 체

제를 동시에 인정하는 통합국가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고 제3의 체제로서 혼합 모델을 상정할 수도 있으며 혹은 북측의 주도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 수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남한의 주도에 의한 자본주의적이며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이 경우에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사회균열구조를 검토해보자. 통일에의 염원과 동포애를 강조할 때 다음의 추론은 일견 비정해 보일 수 있으나 현실세계를 보다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독일과 예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몇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균열은 남과 북의 지역갈등에 의해 새롭게 특징지워질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부분적 이전은 남한 지역내부의 불균형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북쪽 역시 산업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남과 남, 북과 북 내부의 지역갈등의 문제도 물론 존재한다. 남과 북 모두에서 더욱 소외되는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이 출현가능하다. 사회경제적인 갈등 역시 지속되고 증폭될 수 있다. 새로운 투자기회를 맞이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산업화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독일과 달리 산업사회의 후유증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사회경제적인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북한사회의 산업화는 남한사회의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야기할 것이며 계급간의 마찰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내적인 체제통합과 대외적인 국제정치적 흐름은 이념의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서 갈등의 정도를 완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결국 결정적인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과 결합된 남북간의 지역갈등의 문제이다.

통일독일의 역사가 한국사회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인간 사회의 보편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교훈적인 의의를 가지며 통일한국에 나타날 새로운 갈등형태로서 남북간의 지역갈등을 여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발전된 남한과 낙후된 북한사회의 이분법적 도식은 지극히 상투적 논리이지만 또한 엄연한 현실의 논리로서 상당기간 청산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질화 과정이 심화되어 두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에 간극이 존재하지만 역시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 격차이며 이는 정치적, 권력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갈등의 폭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북한 사회의 다수 노동자계급은 남한지역 노동자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관리자 및 전문직에 종사해왔던 집단은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의 상태로 진입할 것이다. 원하는 수준의 생활이 불가능 해졌을 때 그들은 환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 혹은 새로운 가치규범이나 행동양식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한주도의 통일은 남쪽주민의 우월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정치적 주도권을 남쪽의 엘리트집단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산업자본에 의한 북한의 경제개발은 제한된 집단과 지역에 대해서 과실이 돌아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두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으로 남한 경제의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다. 남쪽의 주민들은 통일의 댓가를 점차 강하게 의식할 것이며 이로인한 복지상의 불이익이나 세금부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인구가동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는 남한주민의 북쪽주민에 대한 호의를 냉각시킬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갈등과 결합된 지역적 갈등은 남북간 주민 사이에 사회적 일체감을 파괴시키고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적 삶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남북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대표기제는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성의 문제가 새로운 정치조직이나 사회단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두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특정계급이나 집단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서독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민당은 동독의 노동계급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고 역설적으로 기민당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통해서 동독노동자계급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쪽주민만을 의식하던 기존의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은 종전의 논리를 북쪽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지역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새로운 이익대표방식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사회균열구조는 남북의 지역갈등

을 첨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립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3. 한국사회의 국가적인 역량은 독일의 그것에 훨씬 못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력이나 북한의 경제수준은 서독이나 동독과 비교가 안된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이질화의 정도 역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후의 사태는 오늘의 독일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통일의 과정 자체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북한경제체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선행될 것을 요구한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게 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질적 수준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때 통일의 후유증은 최소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쪽의 준비작업 역시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능력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충분한 통일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장정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통일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가 우리들 모두에게 확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예측을 불허하는지라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의 통일이 때 이르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이 경우의 남북한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서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내용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간 지역갈등의 궁극적인 요인이 물질적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며 여기서 개발전략과 관련된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혹자는 러시아의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면서 고통을 단기화시키는 보다 급진적인 시장경제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북한경제의 급격한 자본주의화는 북한경제의 대남종속성을 심화시켜 지역갈등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남한경제의 과부하로 귀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바람직한 전략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완된 형태의 자본주의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농업과 공업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쪽의 견해가 보다 타당성을 갖는지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는 결국 정치적 위상의 차이와 연계되어 북쪽지역은 통일한국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소외되어 남쪽 정치세력의 선의만을 기다리는 약소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대표기제의 제도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거론된 바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이념을 이 문제와 관련시켜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질적 사회에 있어서 소수세력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여 소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구성에 소수세력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려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역정당의 출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 못지 않게 주관적인 인식의 교정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주민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는 통일이 궁극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남쪽 주민에 대해서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대승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종교단체와 각종 자발적 사회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다.